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 대 윤 의원



“과학산업 투자, 대전의 미래다.”

“유성복합터미널 및 BRT 연결도로 사업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대전교도소,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 문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한 학교용지 반납, 원상회복이 답이다!”



송 대 윤 의원

◎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의 발전방안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대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과학산업 투자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고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국방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이전비로 120억 또 이장우 시장께서 요청한 90억의 예산확보,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전시의 과학산업 투자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역량 분석자료를 보면 대전은 인적자원,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지식창출 등에서 월등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수는 약 18점으로 경기도, 서울에 이어 3위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전시의 과학산업 투자현황 분석자료는 그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이 정부연구개발사업 매칭투자 비중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 총투자비는 약 7조 1천억 원으로 대전시가 전국 1위이지만 매칭 투자비는 3천억 원에 그쳐 총투자 대비 4.2%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인 10%보다 현저히 낮고 전북 9%보다 절반 이상 낮은 비율만 보더라도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칭투자 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를 갖기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도시인 대전시가 연구개발 주체라는 면에서 정부 의존도가 높고 지역혁신체제와의 연결고리가 미흡하여 지역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매칭투자비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하여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도소와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에 도시 외곽지역인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시 인구는 86만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145만여 명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해 유성구 대정동 인근은 도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수요로 대전교도소 부지가 도안지구3단계 개발에 포함되다 보니 신규 대체부지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1997년 최초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건의했고, 20년이 지난 2017년에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선정되어 올해 2월경 법무부, 대전시, LH가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거쳐 추진했지만 여전히 교도소 이전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또한 신속한 이전을 위해 대전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 학하동에 위치한 대전시립정신병원은 낙후시설로 인해 건물신축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하동은 공공민간임대주택사업,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도소가 이전하는 방동으로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교도소와 함께 이전할 경우 현재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고 부지매각 금액으로 단순히 현재의 기능만이 아닌 정신건강 복합의료센터 등으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치료시설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인 축구경기장 확충사업을 방동에 유치하여 정신병원이 기피 시설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벗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 공약한 축구경기장 확충사업의 방동 유치와 대전시립정신병원의 신축이전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 및 BRT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했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을 대체·확장하고 충남서북부와 호남권 등을 연계한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로 인해 더는 주민편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공영개발을 통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발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부지 내 기존 시외버스정류소가 이전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가장 중요한 터미널 부지의 건립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후 여객시설과 함께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조성계획을 제시했지만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행정절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유성복합터미널과 BRT 연결도로 건설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업 모두 동시에 완공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조속한 추진방법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대교차로 건설방식에 관한 질문은 지난 16일 대전시가 지하철도 건설방식의 입체화 추진을 발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대전시민과 이웃들의 갈등을 한 번에 종식시켜주신 이장우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끝으로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가 동시에 떠오르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경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대전에서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가 있다면 자치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안전관리를 하는 것 맞습니까?

대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대전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은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서비스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치안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이자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조례에서 규정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보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활동,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및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대전시는 더욱 적극적인 자치경찰제의 시책 발굴과 시행 그리고 활발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안전사각지대에서 ‘사’ 자가 한자로 ‘죽을 사(死)’라는 것을 아십니까?

죽을 수 있다는 구석·모퉁이의 사각지대, 자치경찰은 그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곁에 경찰이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류 안전도시 대전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경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근시안적 행정으로 자초한 학교용지 반납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전의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으며 그 기반은 학교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도안지구 등 다수의 개발지역에서 학교신설 용지확보와 관련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주 그리고 높게 들려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역의 학교용지에서 이상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교육청은 대전시와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실시계획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친수1블록 내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와 도시공사, 유성구로 2019년 6월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용지 변경 의견을 제출합니다.

초등학교용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 해제, 즉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11월, 초등학교부지가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생증가에 따라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한 통학권 확보 등을 이유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해제는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를 두고 신중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개발계획 시 확보된 학교용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건으로 장기간 미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학령인구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확보된 용지는 향후 학생수용 판단에 따라 학교신설을 위해 교육청이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해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학교용지 해제 3년 후인 2022년 현재 발생합니다.

친수1·2블록 공동주택 2천 세대가 2023년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약 1천 명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교용지 해제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바로 앞을 예측하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해제된 학교용지의 확보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학교신설, 학교용지 확보, 통학구역 조정 등 교육사안은 학부모, 시민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측가능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앞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솔초의 경우 계획된 학급수만큼 증가되어 2018년 증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수초는 개교와 함께 14학급을 증축했고 상대초와 도솔초는 3년 만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학생수용계획을 왜 수립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수십 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것이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동의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행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또한 탁상행정이 아닌 대전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래의 대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는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설동호 교육감은 초·중·고 또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대전에서도, 서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교육학자이십니다.

20대 약관의 나이로 화정초등학교 첫 부임지에서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때 결심한 그 마음이 어디에 계십니까?

학생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송대운 의원님께서서는 과학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과학산업 투자현황과 대전교도소 및 대전시립정신병원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및 BRT 연결도로, 자치경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편의 증진, 치안확보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송대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연구개발사업비 대비 대전시의 매칭투자비 비중이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은 총 6조 8,208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특구 내에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6조 8,208억 원은 사실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6조 8,208억 원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에 5조 8,42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출연연이 밀집되어 중앙정부의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전시 매칭투자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 집행액은 3,005억 원, 아까 4.2%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방의 연구개발사업비 평균 집행액이 1,04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대전시의 3,005억 원은 다른 시·도보다 투자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으로 볼 때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산·학·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매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84년도 개청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대전교도소는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라서 주거지와 인접한 도심 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되는 등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는 교도소 나름대로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서 조기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2,000명을 수용인원 2,900~3,0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정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유성구 방동지역으로 이전대상지를 2017년도에 결정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서 법무부, LH와 3자 업무협약을 2018년도에 체결했습니다.

또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2022년도 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기업 예타 신청을 했고 10월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에 대해서 완료 예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2024년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2024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8년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인근에 있는 대전시립정신병원 신축이전과 축구경기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시립정신병원은 준공한 지 30년 된 노후건물로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부족한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우선 하고 2차로 신축이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도소 주변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교도소 주변으로 배치할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름도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을 바꿔갈 생각입니다.

시설을 잘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시립병원을 새로 신축한다면 건축물도 시대에 맞게, 지역환경에 맞게 제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1차 리모델링, 2차 신축이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류도시로 가려면 꼭 필요한 시설들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 어떤 곳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이고 일류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립정신병원과 축구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투명한데, 인근의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정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성복합터미널은 제가 와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2007년도에 유성복합터미널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됐으니까 벌써 15년 전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15년 전에 종합계획이 추진됐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일차적으로 대전시정이 지금까지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미스로 인해서 유성구를 포함한 서남부권의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성복합터미널이 이렇게 오랫동안 늦어지고 좌고우면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공모사업이 네 차례 좌절되고 2020년도 10월에 복합터미널 추진방향을 공영 개발로 결정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10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내년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설계, 시공, 일괄발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2027년 안에는 꼭 건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실 마음 같아서는 2~3년 안에, 조기에 하고 싶은데 지금 공영개발 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현재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2027년 이전에라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서 대전시민들과 유성구민들 또 나아가서 서구의, 서남부권 시민들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BRT·지하철·시외버스·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과 대전~세종 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263억 원이었습시다만 보상비와 물가변동을 반영하다 보니까 320억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583억 원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성구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 6.6km 구간에 왕복 8차로, 10차로를 신설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설구간 보상이 지연됐고요,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통과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행복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조속하게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교차로 건설방식과 관련해서 현충원로 지하차도 입체화 방식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16일에 이에 대해서 입체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마 의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어서 입체화로 하는 것이 유성 전체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특히 유성IC 주변을 나오면, 사실 유성IC를 나오자마자 삼거리가 있고 월드컵경기장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우회전·좌회전, 또 좌측으로 가도 바로 신호등이 있고 이런 복잡한 체계 때문에 유성IC 주변, 나아가서 충남대학교 정문 앞까지 유성 전체가 지금 굉장히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장대교차로 입체화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취임하고서 장대교차로 입체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왔고, 그렇지만 남북방향 월드컵대로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뜯어내고 입체화했을 경우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반대로, 그것은 놔두고 동서방향을, 현충원 쪽에서 오는 것을 지하로 넣어서 입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매몰비용도 적고 또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또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암교에서 장대교차로 도로를 확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차도와 도로를 확장하는 데 34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조금 더 검토하면서, 구암교에서 장대교차로 도로확장을 1차로

정도로 엇그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번 더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 하에 도시의 미래를 보면 확장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 직원들과 현장을 직접 가보고 1차로가 아니라 2차로, 3차로라도 늘리는 것이, 유성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4월부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장선거 때 말씀드렸던, 지금 호남선에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6차선·8차선 확장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로교통망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유성IC 주변 우측·좌측으로 호남선 7km 정도를, 아예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법도 정부 측과 상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정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민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시·도지사님들과 보령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건설문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세종·충북·충남·대전이 함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지금 교통정체나 체증으로 고생하시는 유성구민들과 서남부권 시민들, 서구의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수요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시책으로 저희가 범죄예방진단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차량지원 문제, 이동형 CCTV, 지역치안 그리고 주민생활안정 시책사업 공모문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자치경찰수요 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 공모협약 추진 등 예산을 지금 시 예산에 태워놨습니다.

송대윤 의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도 2022년도 예산이 4억 8,800만 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9억 9,500만 원으로 약 한 5억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차량지원을 통한 범죄예방진단팀 현장대응력 강화 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동형 CCTV 설치 운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아주 명확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사무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가 대전시에 조기 정착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대윤 의원님께서서는 도안 갑천지구 학교용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 확보 후 해제이유는 2015년도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실시계획 협의단계에서 친수블록의 전체적인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인근 학교 과밀 우려와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2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개교한 대전호수초등학교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19년에 인근 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도안지구 및 주변 개발지구 학교배치계획을 재검토 후 교육부에 보고하라는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배치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친수1·2블록 세대수는 2천여 세대로 초등학교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규모이고, 예상학생 수가 인근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안동로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여건에 대한 대안으로 육교 설치를 요청하였고 2020년도에 학교용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확보입장과 향후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1블록 분양 시 학생 수 증가가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확대하였고,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되어 학생배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재확보하기 위해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간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칭 친수1교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학교용지 재확보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문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초등학교 학교용지는 공영개발일 경우 관련 법령에 무상공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 유권해석도 무상공급 대상이라고 하였지만 용지 재확보 무상공급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긍정적 입장이나 대전시는 의견이 달라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전교육청은 친수1블록의 원활한 학생배치와 신속한 학교신설 추진을 위해 학교용지 비용문제와는 별개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요청하고 학교용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용산지구나 친수구역 등과 같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요건과 교육부 정책의 변화로 증가학생 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활한 학교용지와 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용지 해제를 결정할 경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학교용지 해제 이후 학생배치계획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금년 5월에 학교용지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교용지 해제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계획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대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인석 의원님께서서는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개발 현황으로 천동3구역과 대성지구 총 4,397세대의 대단위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동중학교 학교예정부지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설립은 개발지역 해당 학교군 내 학교의 전환 가능 교실 확보와 증축 등으로도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학교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4년 천동3구역, 대성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군 내 학교 재배치와 학군 재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설립 TF도 구성하여 다양한 학교모델을 개발하는 등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